

‘5년간 1000억’ 글로벌대 10곳 선정

강원대, 울산대 등 10개 대학 발표
대학 규제 넘어 소멸지역 혁신까지

통폐합 신청 4곳, 신청서 제출해야
3, 5년차 평가… 미흡시 국고환수

정부가 지방대학 집중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글로벌대30 프로젝트’ 본 지정 대학에 울산대, 전북대 등 10개 대학이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향후 5년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김우승 교육부 글로벌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3년 글로벌대30 사업 본지정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글로벌사업 본지정에는 ▲강원대·강릉원주대(통합) ▲한림대 ▲안동대·경북도립대(통합) ▲포항공대 ▲부산대·부산교대(통합) ▲충북대·한국교통대(통합) ▲경상국립대 ▲울산대 ▲전북대 ▲순천대 등 10곳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광주 전남대, 강원 연세대 미래캠퍼스, 경남 인제대, 경북 한동대, 충남 순천향대도 예비 지정 대학 명단에 올렸지만, 이들 대학은 본지정에서 결국 탈락했다.

글로벌대30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구제하는 것을 넘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지방대를



김우승 글로벌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월 ‘2023년 글로벌대30 사업 예비지정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15개 예비 지정 대학 중 10곳이 11월 13일 본지정에 선정됐다. /교육부

2026년까지 총 30개 지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정된 대학에 5년 동안 1000억원을 지원하고 대학이 완화나 해제를 요구하는 규제를 우선 풀어줄 예정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투자도 유도한다.

최종 선정 결과, 예비지정 평가를 통과했던 15개 중 통폐합 추진 대학 연합 4개는 단 한 곳도 탈락하지 않았다. 또한, 단독형 통과 대학 다수는 대규모 학과 구조조정을 공약했거나 무학과 광역모집(자율전공학부) 선발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곳이다. 최종 선정 대학 중 국·공립 대학은 7개교다. 사립대는 예비지정에서만 4개 대학이 고배를 마셨다.

시·도별로 강원·경북이 각각 2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경남·울산·충북·전북·전남에 각각 1곳이 지정됐다. 충남

과 광주는 예비지정에서 탈락했고 대구·대전·세종·제주도 예비지정 단계에서부터 명단에 든 대학이 아예 없었다.

당국은 오는 22일까지 탈락한 대학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최종 결과를 이달 말 각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다.

최종 지정 대학은 내년 2월까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세부 추진 계획을 보완하고 매년 성과 점검을 받게 된다.

올해를 1년차 사업으로 보고 오는 2025년(3년차)과 2027년(5년차)에 중간, 종료평가를 각각 실시한다.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성과가 미흡하면 국고를 끊을 수 있다. 필요하면 사업비 환수도 이뤄진다.

특히 통폐합을 신청한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충북대-한국교통대 등 4곳은 1년 안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신규 글로벌대30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내년 4월 예비지정, 이어 7월에 본지정 결과를 각각 내놓을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글로벌대30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 현장에서 시작되는 혁신과 변화의 물결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며 “교육부는 글로벌대학을 선두로 모든 대학이 과감한 혁신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건국대 사범대학 50주년 “미래교육 이끌 것”

“교육 본질 지키며 교사 양성 전진”

건국대학교가 지난 10일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사범대학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에는 학교법인 건국대 유자는 이사장과 건국대 전영재 총장, 박종효 사범대학장,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홍성구 국립사범대학장협의회장 등 내빈을 비롯해 건국대 사범대학 교수 및 학생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건국대 사범대학은 1973년 설립해 1978년 첫 번째 졸업생 120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874명의 미래 교육 인재를 사회로 배출해왔다. 또 최근 2년간 교원

양성기관평가 A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우수기관으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종효 학장은 “사범대학은 대학과 학교의 위기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이 격변과 고난의 시기에 다시 교육의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 사범대학은 교육의 본질을 굳건히 지키며 훌륭한 교사 양성에 전진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 사범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지역학교 교류와 교육협력 실습에 힘써 온 정치훈 음악교육과 동문회장에게는 공로상을 수여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어린이집 ‘빈대 제로’ 만든다

이달 말까지 어린이집 내 특별소독

서울시는 ‘어린이집 빈대 예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시는 이달 말까지 어린이집의 조리실·식품, 화장실, 침구, 놀잇감 등에 대한 특별 소독을 추진한다.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실내 소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소독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어린이집에서는 일일점검표를 통해

침구류, 교재·교구장, 벽면 스위치, 천장, 바닥, 창문 등 빈대 발생 의심 구역을 매일 확인할 예정이다. 각 어린이집 원장은 빈대 발생 시 120다산콜센터, 보건소, 서울시 담당 부서에 즉각 신고하고 부모에게 안내해 하원 조치한 후 긴급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시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가려워하는 행동과 빈대 물림 자국을 수시로 살펴 빈대 물림이 의심되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바로 가까운 병원(피부과, 가정의학과, 감염내과)에 내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웰니스 관광은 인천으로… 최대 50% 할인

인천시, 웰니스 관광상품 할인 기획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깊어져 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인천웰니스 관광상품 50% 할인 온라인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인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선착순으로 최대 5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인천4책(仁川思

索) 테마에 맞춰 다양한 웰니스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연말 인천여행의 매력을 알리고자 한다.

그중 14건의 인천웰니스 관광상품을 구성하여 ‘여기어때(종합여행·여가 플랫폼)’에서 할인 기획전을 개최한다.

‘여기어때’에서 인천웰니스 관광상품 예약 시 50%의 할인쿠폰이 제공되며,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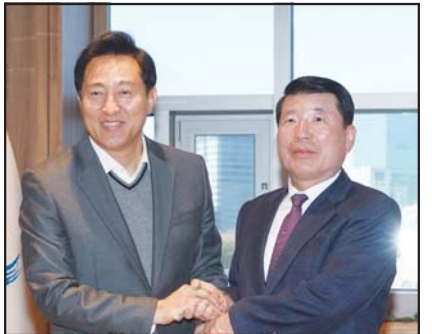
오세훈, 구리시장과 면담… 서울 편입 논의

백경현 “서울 편입, 구리발전 도움”
오세훈 “총선 관계없이 논의 진행”

오세훈 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면담은 이달 6일 김포시장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과 회동이다. 앞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백 구리시장은 면담에서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에 의해 도시 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지하철 연장 등 교통인프라가 향상돼 구리시민의 편익이 증가하고 서울 시도 구리의 유흥지에 각종 공공시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장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 관련 논의를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서울시

등을 이전에 부지를 복합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제안에 대한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구리시와 편입에 대한 효과 및 장단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

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차등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서울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김포·구리시와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中광군제, 거래·배송 늘었지만…“소비엔 신중”
/사진 뉴시스
▲日, 정보위성 탑재 H2A 48호기 내년 1월 발사…“북 미사일 동향 파악”

▲마쓰노 日관방, 중국내 일본인 잇단 구속에 “조기 귀국 등 요구”
▲中, 정상회담 맞춰 보잉 737 MAX 구매 재개



▲바이든, 카타르 국왕과 인질 석방 협상 논의…“지속적 노력”
▲“시리아 미군기지에 로켓포 공격…미군 여러 명 사망”
/사진 뉴시스